

교육부 공고 제2019 - 15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세부과제로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내실화 및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우선 유아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유치원 급식에 대해 학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함. 또한 유치원의 정보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관할청의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을 신설하여 유치원 정보 공시를 내실화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학부모 참여 강화(안 제22조의11)
- 나. 유치원 정보공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 2 및 별표 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023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전화 : 044-203-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1제1항 중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공립”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병설한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11제2항 중 “조례”를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안)(제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시정명령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유형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개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개별기준에 따르되,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가중·감경할 수 있다.
- 라. 차등적 재정지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마. 관할청은 아래 개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치의 양형은 아래 개별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차등적 재정지원	차등적 재정지원	차등적 재정지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11(소위원회) ①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u>심</u> 의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서 <u>신 설</u> >	제22조의11(소위원회) ① ----- ----- <u>심의</u> · <u>자문하기 위하여</u> ----- ----- ----- ----- -. <u>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병설한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u>조례</u> 로 정한다.	② ----- ----- ----- ----- <u>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u> -----.
< <u>신 설</u> >	제35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 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립유치원공공성장화지원팀	
연 락 처	044-203-7141